“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진통 있어도 두달내 결론”

시민권익위 내 공론화위 다음주 결성
“자주 만나며 시민단체와 의견 조율”

최영태 공동위원장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을 결정하게 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된다. 7일 출범한 시민권익위원회가 중립적인 사고를 가진 전문가 7~9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9월 말에서 늦어도 10월 초까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운영 형태를 놓고 광주시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간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지하 5~7m 정도를 파서 선로를 설치하는 ‘저심도’ 방식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측은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나 노면전차(TRAM)를 설치하자고 대립하고 있다.

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나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는데다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도로 중앙 2~3차선을 점유하는 등 여건도 감안해야하며, 사업 포기에 따른 매몰 비용도 상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도시철도 1호선의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미래 도시철도 수요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2호선 건설비에 1·2호선 운영비 등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공동위원장(전남대 교수)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시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조율해서 최대한 원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장 어려운 문제를 첫 과제로 받았다.

▲16년간 반복돼온 문제인만큼 갈등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간격을 좁혀보도록 하겠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말, 10월 초까지 이 문제의 결론을 내려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자는 것에는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주제와 로드맵을 정할 별도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시가 반대하고 있어 조율을 해야 한다.

-공론 방식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광주시는 여론조사, TV토론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며,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숙의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 최대한 중간적인 입장에서 접점을 찾아볼 생각이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것이다. 약간의 진통은 불가피하겠지만, 충분한 의견 교환과 조율을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경우 상호 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범시민재난안전 추진단 발대 8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시민재난안전 추진단 발대식에서 식전 공연으로 빛고을유치원생들이 율동과 함께 안전동요를 부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조이롱 전기차 보조금 심의 무기한 연기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는 조이롱 코리아의 ‘전기차 지방비 보조금 이행 여부 심의’를 광주시가 무기한 연기했다.

광주시는 오는 17일 감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 계획이었던 조이롱 코리아 E6 전기차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미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6일 조이롱 측이 광주에 전기차 판매 시 조건부로 제시한 시비 보조금 이행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었다.

광주시는 조이롱의 미니 전기버스(E6)에 대당 3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대신 조이롱 측에 서비스센터 3곳 설립, 대당 1억 5000만원으로 책정된 차량 가격 변동이 5% 내외를 넘지 않을 것, 충분한 충전기 인프라 구축 등의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에 조이롱 측은 최근 공문을 보내 차량 가격을 1억4500만원으로 확정하고 광주시가 제시한 조건 등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이롱은 2016년 3월 25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까지 광주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전기차 양산 설비를 갖추고 지난해(2017년)부터 E6를 2000대씩 생산하겠다는 협약을 광주시와 체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이롱 측의 투자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이행 여부 심의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해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이롱 코리아 관계자는 “모든 투자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현대차 투자와 함께 조이롱의 공장 투자도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조례 만든다

의견 수렴·청렴문화 사업 추진

광주시가 8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줄곧 공직사회에 청렴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조직 다잡기’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시에 따르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협약 체결 및 협약 이행 평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 수렴, 청렴문화 확산사업 추진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은 시장, 교육감, 자치구청장, 공직유관단체장과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 대표자, 공익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민간부문 의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민관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한 의뢰와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민사회, 기업, 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공직사회의 청렴을 민간에서부터 강하게 추동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 안팎의 시각이다.

이 시장은 7일 간부회의에서도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혁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혁신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인사혁신, 조직혁신, 문화혁신 등 광주시정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시정혁신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제가 이끄는 민선7기에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공직자답지 못한 부조리나 부패는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 공무원은 “참석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정도로 이 시장의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며 “시민권익위원회에 이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구성은 시 조직 바깥에서부터 공직 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의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앞두고 ‘대통령배 수영대회’ 치른다

오늘부터 13일까지 3000명 참가

전국 최고 권위의 수영대회 중 하나인 제37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가 광주에서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대한수영연맹 주최, 광주시수영연맹 주관, 광주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관계자 등 총 3000여 명이 참가한다.

초·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4개 종목(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에서 신기록을 향한 도전을 펼친다.

특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10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경기 진행에 대한 점검, 우수선수 발굴, 광주수영대회에 대한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 음식과 숙박업소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9일 오후 3시 30분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개회식을 한다. 개회식에 이어 오후 상무지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대한수영연맹 대의원인 17개 시·도 수영연맹 회장이 참석하는 ‘대한수영연맹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용섭 시장은 대한수영연맹과 시·도 수영연맹 지도부에 광주수영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대회 붐 조성, 경기관람 티켓 판매 협조, 시·도 소재 기업의 광주수영대회 협찬 협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내년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사전 대회 성격인 만큼 경기운영뿐만 아니라 광주를 찾는 선수와 가족에 대한 손님맞이 대책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고의 권위의 수영대회 중 하나인 제37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가 광주에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